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2022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 일시 | 2021. 11. 22.(월) 14:00~16:00

| 장소 | 충남도청 대회의실(본관 4층)

| 주최 | 충청남도의회

| 주관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2022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2021. 11. 22.(월) 14:00~16:00
충남도청 대회의실(본관 4층)



주최 충청남도의회

주관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식	14:00 ~ 14:20 (20')	❖ 개회 및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회사 :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 기념촬영
발제	14:20 ~ 14:50 (30')	❖ 발제 ▶ 신필승 (충청남도 예산총괄팀장) ▶ 황인명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 ▶ 국정덕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종합토론	14:50 ~ 16:00 (70')	❖ 좌장 ▶ 최진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충남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 김연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 강마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최두선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 진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 ▶ 김효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Contents



개회사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1
---------------	---



발 제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5
신필승 충청남도 예산총괄팀장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15
황인명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	
2022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주요특징과 분석내용	23
국정덕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토 론

김 연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45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47
강마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55
최두선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61
진 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	63
김효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65

개 · 회 · 사



도민의 삶의 질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기회 되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명선입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충청남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최진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1월 5일 충청남도는 전년 예산 대비 6,688억원(7.7%) 증액한 9조 3,801억원을, 충청남도교육청은 6,801억원(19.1%) 증액한 4조 2,349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규모의 확대, 사업의 다양화 등으로 도의회 재정심의회는 더욱더 전문성과 적시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각계각층의 시각에서 충남도의 시대적 과제와 재정여건 등을 짚어보고, 도민의 삶의 질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충남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재정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내실 있는 도정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 11. 22.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명 선

**발
제**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신필승 충청남도 예산총괄팀장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황인명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

**2022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

국정덕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목차

- I. 예산편성 기본방향 / 6
- II. 예산안 규모 / 7
- III. 일반회계 예산안 / 9
- IV. 특별회계 예산안 / 12
- V. 기금운용 계획안 / 13



충 청 남 도
(예산 담당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I 예산편성 기본방향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예산편성 기본방향 〉

① 민선7기 안정적 성과창출을 위한 공약역점사업에 재정투자 집중

-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목표
-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사업 투자

중 점 투 자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미래먹거리사업 발굴 ■ 일 잘하는 지방정부 및 공공서비스 확대 ■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 든든한 출산·양육과 존중받는 어르신 생활환경 조성 ■ 빈틈없는 자연 재난 예방으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풍요롭고 쾌적한 삶	■ 문화·예술·체육 확대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균형발전과 연계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화
	활력이 넘치는 경제	■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고용위기 선제 대응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신산업 발굴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 농림축산어업 부가가치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미래발전을 견인할 교통 인프라 구축 ■ 연안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바다의 미래가치 창출

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 투자

- 도민 기본복지 서비스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외계층의 위기극복 및 도민의 문화체육 향유 확대

③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 기존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미흡 사업은 감액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 신규 정책사업은 one-in, one-out 원칙 적용하되 공약·역점 사업 위주 중점 반영
-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 필수 소요반영

II 예산안 규모

◇ 총 규모 : 9조 3,801억원('21년 본예산 대비 7.68%, 6,688억원 ↑)

○ 일반회계 : 7조 8,200억원('21년 본예산 대비 8.22%, 5,941억원 ↑)

○ 특별회계 : 9,187억원('21년 본예산 대비 9.46%, 794억원 ↑)

○ 기금운용계획 : 6,414억원('21년 본예산 대비 △0.73%, △47억원 ↓)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금액	%
합	계	93,801	100.00	87,113	100.00	6,688	7.68
일	반 회 계	78,200	83.37	72,259	82.95	5,941	8.22
특	별 회 계 (8 개)	9,187	9.79	8,393	9.63	794	9.46
	도 청 소 재 도 시 건 설	17	0.02	61	0.07	△44	△72.23
	균 형 발 전	455	0.48	352	0.40	103	29.22
	안 면 도 관 광 지 개 발	9	0.01	47	0.05	△38	△81.01
	의 료 급 여 기 금	4,052	4.32	3,869	4.44	183	4.72
	광 역 교 통 시 설	7	0.01	14	0.02	△7	△49.26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62	0.17	162	0.19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167	0.18	170	0.19	△3	△1.31
	소 방	4,318	4.60	3,718	4.27	600	16.13
기	금 (1 4 개)	6,414	6.84	6,461	7.42	△47	△0.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9	1.23	1,218	1.40	△69	△5.67
	지 역 개 발 기 금	2,409	2.57	2,474	2.84	△65	△2.62
	재 해 구 호 기 금	441	0.47	435	0.50	6	1.36
	재 난 관 리 기 금	411	0.44	267	0.31	144	53.79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407	1.50	1,518	1.74	△111	△7.27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44	0.05	53	0.06	△9	△16.67
	농 어 촌 진 흥 기 금	267	0.28	256	0.29	11	4.33
	사 회 복 지 기 금	65	0.07	66	0.08	△1	△1.47
	식 품 진 흥 기 금	69	0.07	70	0.08	△1	△1.59
	양 성 평 등 기 금	35	0.04	36	0.04	△1	△3.68
	청 소 년 육 성 기 금	27	0.03	28	0.03	△1	△2.06
	사 회 적 경 제 기 금	16	0.02	10	0.01	6	61.07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	0.05	30	0.03	21	68.03
	정의로운 전환기금	23	0.02			23	순증

분야별 중점 투자

①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실현

○ 일잘하는 지방정부 및 공공서비스 확대,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56억원	▲ 도민참여예산	56억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59억원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49억원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	42억원	▲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33억원

②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도민의 생명보호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81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848억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04억원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5억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190억원	▲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60억원

③ 풍요롭고 쾌적한 삶

○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관광자원 인프라구축, 미세먼지 저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57억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0억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47억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6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62억원	▲ 자연소리 힐링길 조성(2단계)	23억원

④ 활력이 넘치는 경제

○ 고용위기 선제대응,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 미래전략산업 육성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68억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38억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00억원	▲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	72억원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9억원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6억원

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

○ 농림축산어업의 질적발전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532억원	▲ 농어민수당	528억원
▲ 어촌뉴딜	525억원	▲ 더 행복한 주택	336억원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18억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지원	56억원

Ⅲ 일반회계 예산안

❖ 2022년도 예산안 : 7조 8,200억원('21년 7조 2,259억원 대비 5,941억원 증)

① 세입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 감	
			금 액	%
합 계	78,200	72,259	5,941	8.22
자체수입	28,160	24,407	3,753	15.38
지방세수입	27,242	23,418	3,824	16.33
세외수입	918	989	△71	△7.18
이전재원	46,241	44,387	1,854	4.18
지방교부세	7,685	7,210	475	6.59
국고보조금 등	38,556	37,177	1,379	3.71
지 방 채	1,527	2,039	△512	△25.1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72	1,426	846	59.33

② 세출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 감	
			금 액	%
합 계	78,200	72,259	5,941	8.22
법적·의무적 예산	18,051	16,475	1,576	9.57
시군 조정교부금	5,870	5,363	507	9.45
징수교부금	440	371	69	18.60
교육청 전출금	3,705	3,240	465	14.35
예비비	375	496	△121	△24.40
재무활동 등	5,174	4,530	644	14.22
행정운영경비	2,487	2,475	12	0.48
이전재원사업	46,762	44,361	2,401	5.41
국고보조사업 등	46,703	44,309	2,394	5.40
특별·소방안전교부세	59	52	7	13.46
자체사업	13,387	11,423	1,964	17.19

③ 주요 사업 내역

1. 국고 보조사업

(단위 : 억원)

■ 기초연금 지급	8,959 (국8,608) (도351)	■ 생계급여	2,292 (국2,076) (도216)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69 (국1,466) (도303)	■ 아동수당 급여지급	1,235 (국1,038) (도19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81 (국754) (도226)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48 (국751) (도97)
■ 주거급여	658 (국599) (도59)	■ 전기자동차 보급	655 (국504) (도151)

2. 군특 보조사업

(단위 : 억원)

■ 도시 재생사업	764 (균637) (도127)	■ 기초생활거점육성	376 (균376)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250 (균210) (도40)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26 (균173) (도53)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97 (균136) (도61)	■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196 (균196)

3. 기금 보조사업

(단위 : 억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3,550 (기3,550)	■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247 (기206) (도41)
■ 국가예방접종실시	224 (기172) (도52)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4 (기181) (도23)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36 (기136)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25 (기120) (도5)

4. 전환사업(군특 지방이양)

(단위 : 억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05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486
■ 지방하천정비사업(시군)	316	■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290
■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50	■ 유기질비료 지원	139

5. 주요 자체사업

(단위 : 억원)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532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528
■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차액보육료 등)	240	■ 행복키움수당 지원	227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출자금)	200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	179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18	■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68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	■ 시외버스 재정지원	91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86	■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86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85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9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58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56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56	■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56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9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47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3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40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35	■ 의회청사 환경개선	35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34	■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33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32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	22
■ 충남 관광재단 운영	16	■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9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활성화	6	■ 도립대 신입생 전학기 장학금 지원	4

IV

특별회계 예산안

- ❖ **2022년도 예산안 : 9,187억원**(’21년 8,393억원 대비 794억원 증)
 - 특별회계 : 8개(도청소재도시건설, 균형발전,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등)

- **도청소재도시건설 : 17억원**(’21년 61억원)
 - 내포신도시 업무지원 및 홍보 15, 공동캠퍼스 설립 연구용역 등 2
- **균형발전 : 455억원**(’21년 352억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454, 예비비 등 1
- **안면도관광지개발 : 9억원**(’21년 47억원)
 - 안면도 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5, 안면도 관광지 재산관리 등 4
 -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21년 준공 계획으로 사업비 감소
- **의료급여기금 : 4,052억원**(’21년 3,869억원)
 - 의료급여 예탁금 3,992,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60 등
- **광역교통시설 : 7억원**(’21년 14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 부담금 등 3
- **학교용지부담금 : 162억원**(’21년 162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77억원, 예탁금 등 85억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 167억원**(’21년 170억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71,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23, 충남에너지 센터 운영 15, 기후환경변화 조사연구 등 58
- **소방특별회계 : 4,318억원**(’21년 3,718억원)
 - 소방대응력 및 예방안전활동 강화 549,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181, 시군 소방서 운영 341, 행정운영경비 등 3,247

V

기금운용 계획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414억원('21년 6,461억원 대비 △47억원 감)

■ 기금운용 : 14개(통합재정안정화,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1,149억원('21년 1,218억원)
 - (통합계정) 1,048억원('21년 1,094억원) / 예탁금 937, 예치금 98, 예수금원리금 상환 13
 - (안정화계정) 101억원('21년 124억원) / 예치금 회수 101
- 지역개발기금 : 2,409억원('21년 2,474억원)
 -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947, 예치금 462, 일반회계 예탁금 1,000
- 재해구호기금 : 441억원('21년 435억원) / 구호비 18, 예치금 423
- 재난관리기금 : 411억원('21년 267억원)
 -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137, 예치금 274
- 중소기업육성기금 : 1,407억원('21년 1,518억원)
 - 예치금 945, 예탁금 262, 이차보전금 등 200
- 남북교류협력기금 : 44억원('21년 53억원)
 - 예치금 38,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6
- 농어촌진흥기금 : 267억원('21년 256억원) / 예탁금 230, 예치금 34, 이차보전 3
- 사회복지기금 : 65억원('21년 66억원)
 - 자활사업·노인회·난치병치료후원 등 3, 예탁금 등 62
- 식품진흥기금 : 69억원('21년 70억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6, 식품위생 교육 등 2, 예탁금 등 61
- 양성평등기금 : 35억원('21년 36억원)
 -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2, 예치금 3, 예탁금 30 등
- 청소년육성기금 : 27억원('21년 28억원) / 예치금 6, 예탁금 21 등
- 사회적경제기금 : 16억원('21년 10억원) / 이차보전 5, 예치금 11
- 국외소재문화재기금 : 51억원('21년 30억원) / 예치금 51
- 정의로운 전환기금 : 23억원('21년 1추 10억원) / 예치금 23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 I. 재정여건 / 16
- II. 예산편성 기본방향 / 17
- III. 예산안 규모 / 18
- IV. 주요사업내역 / 20
- V. 기금운용계획안 / 22



충청남도교육청
기 획 국 예 산 과

1. 재정 구조

- 재원의 의존성(이전수입 97.14%, 2020 결산기준)이 큰 재정구조이며 내국세 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 '22년도 전체 세출에서 인건비(54.5%), 학교운영비(8.9%), 기본운영비(2.4%), 등 경상경비 지출 비율이 절대적임.
- ☞ 학교운영비 등 학교로 전출하는 경비를 제외하면 탄력적 재정운영이 가능한 경비(14%)는 매우 부족함(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중)

2. 세입 여건

- 정부의 재정책장정책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0.9% 증가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조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이 현재 21%에서 '23년 까지 25.3%로 인상 계획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

3. 세출 여건

-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 교육복지 수요, 학교운영비 증가 등 경상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
- 향후 '25년 까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사업, 공간혁신 사업 등 1조 3600억원의 대규모 시설 투자 필요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기본 방향

선택과 집중·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

-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 재정운용 전 단계에 걸친 효율성·건전성 높이기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
-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반영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 재정운영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 실현

< 기 본 방 향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회복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유대감 약화 등 학습결손 해소
- 기초학력 보충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 지원

◆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내실화

-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 교육안전망 구축 지원

- 무상교육 완성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 지원
- 방역인력 및 물품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III

예산안 규모

1. 규모

(단위 : 억원)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4조 2,349억	3조 5,548억	6,801	↑19.1%

2. 세입[관별]

(단위 : 억원, %)

합 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42,349	35,548	6,801	19.1
이 전 수 입	4조 1,849억원(↑6,773억원)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 보통교부금	34,551	28,205	6,346	22.5
○ 특별교부금	465	351	114	32.6
○ 증액교부금	290	295	△5	△1.7
○ 국고보조금	81	124	△43	△34.5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654	1,674	△20	△1.2
○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도세전입금 등)	4,392	3,873	519	13.4
○ 비법정이전수입(교육경비 등)	398	536	△138	△25.7
○ 민간,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7	18	△1	△6.5
자 체 수 입	48억원(↓6억원)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 교수학습활동수입	6	0.3	5.7	2,040
○ 행정활동수입	9	11	△2	△16.9
○ 자산수입	4	4	0	0
○ 이자수입	27	39	△12	△29.9
○ 기타수입	2	0.5	1.5	222.3
기 타	452억원(↑34억원)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 전년도이월금	400	418	△18	△4.3
○ 금융자산회수	52		52	순증

3. 세출(부문별)

(단위 : 억원,%)

합 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42,349	35,548	6,801	19.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9,544억원(↑5,163억원)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 인적자원운용	346	354	△8	△2.3
○ 교수-학습활동지원	3,378	2,334	1,044	44.7
○ 교육복지	2,764	2,555	209	8.2
○ 보건급식	598	226	372	164.6
○ 학교재정지원관리	6,532	6,468	64	1.0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926	2,444	3,482	142.4
평생교육	92억원(↑12억원)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 평생교육	92	80	12	15.0
교육일반	1,505억원(↑275억원)			
	2022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 교육행정일반	635	415	220	53.0
○ 기관운영	636	470	166	35.3
○ 재무활동	234	345	△111	△32.1
예비비 및 기타	151억원(↓14억원)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 예비비 및 기타	151	165	△14	△8.5
인건비	21,057억원(↑1,365억원)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증감률
○ 인건비	21,057	19,692	1,365	6.9

IV

주요사업 내역

1. 교육결손 회복 지원

○ 교과보충 학습지원

• 기초학력 향상지원	230억원	• 방과후 학교 운영	159억원
•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	15억원	• 고교연합 학력 평가	10억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7억	• 학습준비물 지원	7억

○ 학생·교원 심리정서 지원

• 인성교육 지원	29억원	•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24억원
• 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24억원	• 학업중단 예방지원	12억원
• 학생상담활동 지원	8억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5억

○ 직업계고 지원

• 산업체 맞춤형 교육지원	127억원	• 취업기능 강화	48억원
• 특성화고 학과 개편	115억원	• 실습여건 개선	95억원
• 산학협력교육 운영	36억원	• 해외 인턴십 지원	17억

2.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내실화

○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

• 특색사업 운영	118억원	• 체육교육과정 운영	46억원
• 운동적성 우수학생 육성	42억원	•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38억원
•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29억원	•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25억

○ 미래교육 학습 환경 구축

• 스마트 교육 추진	278억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959억원
•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228억원	• 생활지도 운영	61억원
• 과학교실 운영	9억원	• 발명교실 운영	15억

3. 교육 안전망 구축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유아학비 지원	843억원	• 방과후 과정 운영	541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105억원	•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49억원
• 유아교육 지원	26억원	• 유치원 학부모 연수	10억

○ 돌봄 및 방역 지원

• 돌봄프로그램 운영	96억원	• 유아돌봄사업 운영	28억원
•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	1억원	• 방역인력지원 및 안전망 구축	167억원

○ 취약계층 지원

•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지원	216억원	• 교육급여 지원	61억원
•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56억원	• 저소득층 및 특수학생 수강료 지원	106억원
• 장애학생 치료	37억원	• 다문화교육 지원	32억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35억원	• 특수교육 보조 인력 운영	17억원

V

기금운용 계획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874억원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2086억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788억원

1.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2,086억원('21년 2,069억원)

- 예치금회수 2,070억원 / 예금이자 16억원

2.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788억원('21년 767억원)

- 예치금회수 705억원 / 전입금 78억원 / 예금이자 5억원

2022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

2021. 11.



Contents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I. 재정총량 분석
- II. 유형별 분석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 I. 재정총량 분석
- II. 유형별 분석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I 재정총량 분석

I 01 재정규모

I . 재정총량 분석

- ✔ '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9조 3,801억원 규모로 편성
- ✔ 최근 5년간('18~'22) 재정규모는 연평균 9.0% 증가, '15~'17(9.3%) 대비 다소 둔화
 - 최근 5년간('18~'2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연평균 각각 10.9%, 18.7% 증가한 반면 기금은 10.8% 감소

2016~2022년도 충청남도 재정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15~'17	'18~'22
합 계	60,013	62,416	66,477	72,646	77,835	87,113	93,801		
전년비	14.8	4.0	6.5	9.3	7.1	11.9	7.7	9.3	9.0
일반회계	45,570	47,350	51,735	57,400	62,760	72,259	78,200		
전년비	8.1	3.9	9.3	11.0	9.3	15.1	8.2	6.0	10.9
특별회계	10,710	4,375	4,630	5,294	5,434	8,393	9,187		
전년비	63.8	△ 59.2	5.8	14.3	2.6	54.5	9.5	△ 18.2	18.7
기 금	3,733	10,691	10,112	9,952	9,641	6,461	6,414		
전년비	4.3	186.4	△ 5.4	△ 1.6	△ 3.1	△ 33.0	△ 0.7	72.8	△ 10.8

주: 각년도 예산안 기준임

I 02 통합재정수지

I . 재정총량 분석

☑ '22~'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2년도 충청남도 통합재정수지는 2,871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 60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18년 261억원 적자에서 '22년 2,871억원 적자로 최근 5년간 적자폭이 10배 이상 확대
- 통합재정수지 악화는 순지출 증가(1조 1,559억원), 용자지출 증가에 따른 순융자 증가(18억원) 등에 기인

2018~2022년도 충청남도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종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추정치	추정치
통합재정규모(A=C+F)	5,897,738	6,574,066	8,416,703	7,641,715	8,805,357
순수입(B)	5,871,636	6,539,874	7,895,945	7,415,304	8,518,232
순지출(C)	5,878,561	6,597,987	8,391,087	7,647,549	8,803,475
용자지출(D)	102,960	25,250	98,100	10,250	20,160
용자회수(E)	83,783	49,171	72,484	16,084	18,278
순융자(F=D-E)	19,177	△ 23,921	25,616	△ 5,834	1,882
통합재정수지(G=B-C-F)	△ 26,102	△ 34,192	△ 520,758	△ 226,411	△ 287,125

주: 2018~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결산기준, 2021~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추정치

5

I 03 지방채무(1)

I . 재정총량 분석

☑ '22년 충청남도는 지방채무 1조원, 예산 대비 지방채무비율 13% 시대 진입

- '22년 지방채무는 1조 2,209억원으로 '18~'22년 동안 연평균 15.0% 증가 전망
- 예산안 대비 지방채무 비율은 '18년 9.7%에서 '22년 13.0%로 3.3%p 악화 전망
- '19년까지 전무했던 외부차입금은 '20년 1,771억원에서 '22년 5,111억원으로 연평균 69.9% 증가 전망

☑ 코로나19 극복, 미래성장 동력 확보, 복지지출 소요 증가 등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방채무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이 긴요

2018~2022년도 충청남도 지방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8~'22
1. 지방채무(총 채무)	698,022	604,772	793,454	988,254	1,220,954	15.0
- 외부차입금	0	0	177,100	358,400	511,100	69.9
- 지역개발채권	698,022	604,772	616,354	629,854	709,854	0.4
2. 예산(최종예산)	7,170,658	7,871,979	9,747,087	10,263,217	9,380,086	6.9
- 일반회계	5,541,023	6,202,340	8,043,960	8,567,322	7,820,000	9.0
- 특별회계	483,935	598,134	579,602	920,263	918,724	17.4
- 기금	1,145,700	1,071,505	1,123,525	775,632	641,362	△ 13.5
3. 예산대비 채무비율	9.73	7.68	8.14	9.63	13.02	

주: 1) 2021년은 3회 추경안 기준, 2022년은 예산안 기준임

2) '18~'22는 2018~2022년 연평균증가율이며, 외부차입금은 2020~2022년의 연평균증가율임

6

I 03 지방채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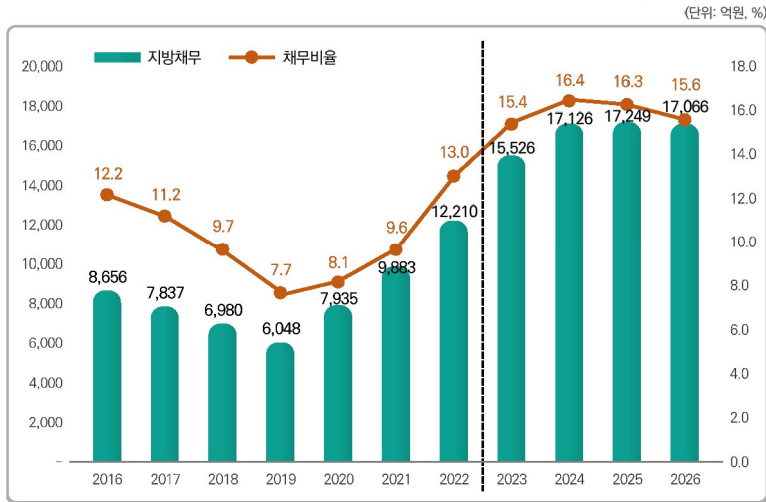
I . 재정총량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무는 '26년 1조 7,066억원까지 증가할 전망

- 지방채무 비율을 '24년까지 16.4%로 확대하고 '26년 15.6%로 하향 관리하겠다는 집행부 계획은
-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건전화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18년 지방채무가 6,980억원으로 '16년 8,656억원에서 1,676억원을 절감한 과거사례를 참고할 필요

☑ '20년 충청남도 지방채무는 17개 시도 중 4번째로 건전했으나 중기계획을 고려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2016~2026년도 충청남도 지방채무 현황 및 중기전망



주: 2023~2026년 재정규모, 채무비율은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무 기준으로 산출

2020년 시도별 지방채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채무	최종예산	채무비율
부산	29,210	158,655	18.4
서울	81,422	489,512	16.6
울산	8,457	51,481	16.4
대구	20,893	138,723	15.1
세종	2,801	18,882	14.8
광주	10,180	72,814	14.0
인천	18,103	136,518	13.3
강원	10,434	88,236	11.8
경북	15,550	131,879	11.8
전남	12,227	111,995	10.9
충북	7,577	70,366	10.8
대전	8,005	75,686	10.6
제주	7,359	69,565	10.6
충남	7,935	97,242	8.2
전북	6,591	93,673	7.0
경남	7,502	120,583	6.2
경기	17,693	384,750	4.6

주: 2020년 시도별 재정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II 유형별 분석

01 자원배분(1) : '10년~'22년 주요 분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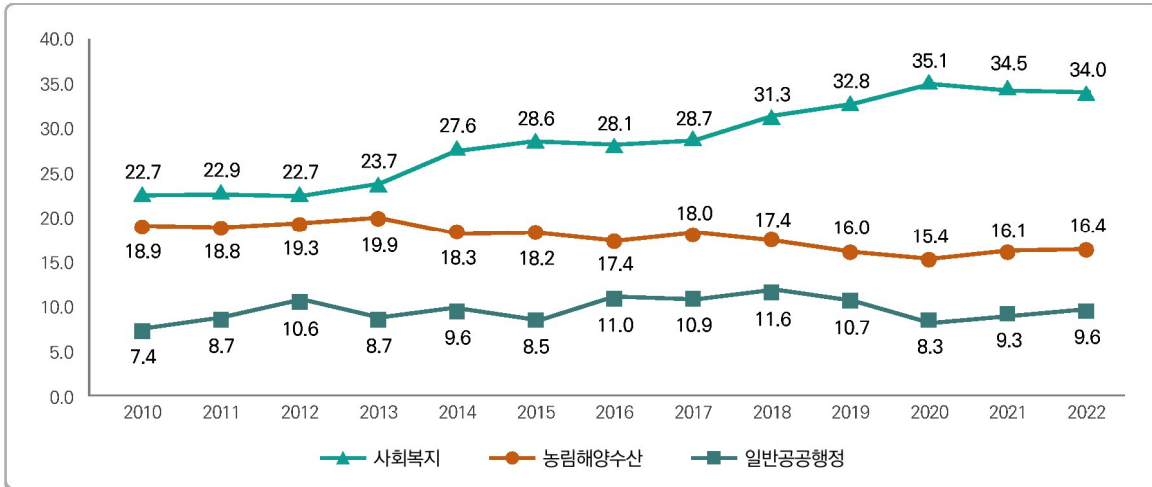
II. 유형별 분석

☑ 14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분야는 '10년 22.7% → '22년 34.0%(11.3%p 증가)

- (일반공공행정 분야) '10년 7.4%에서 '22년 9.6%로 2.2%p 증가
- (농림해양수산 분야) '10년 18.9%에서 '22년 16.4%로 2.5%p 감소
- 다만, 농어민수당 등에 기인하여 '21년 16.1%에서 '22년 16.4%로 0.3%p 증가

2010~2022년 주요 분야별 비중 추이

(단위: %)



주: 일반회계 기준임

9

01 자원배분(2) : '22년 분야별 규모

II. 유형별 분석

☑ 사회복지 분야는 3조 840억원(비중: 35.3%), 전년 대비 1,851억원 증가

- 과학기술 분야(227억원)는 전년 대비 47.5%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 분야(2,379억원) 27.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5,793억원) 23.8%, 교육 분야(4,005억원) 15.3% 순
- 예비비는 전년 대비 125억원 감소한 376억원,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397억원 증가한 5,672억원으로 편성

2022년도 충청남도 분야별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8,738,724	100.0	8,065,187	100.0	673,537	8.4
1. 일반공공행정	752,478	8.6	672,355	8.3	80,123	11.9
2. 공공질서 및 안전	579,339	6.6	467,946	5.8	111,393	23.8
3. 교육	400,496	4.6	347,472	4.3	53,024	15.3
4. 문화 및 관광	355,681	4.1	343,600	4.3	12,080	3.5
5. 환경	556,922	6.4	538,325	6.7	18,597	3.5
6. 사회복지	3,084,032	35.3	2,898,886	35.9	185,146	6.4
7. 보건	237,884	2.7	187,158	2.3	50,726	27.1
8. 농림해양수산	1,297,694	14.8	1,170,210	14.5	127,483	10.9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8,915	2.8	252,497	3.1	△3,581	△1.4
10. 교통 및 물류	254,585	2.9	266,741	3.3	△12,156	△4.6
11. 국토 및 지역개발	343,220	3.9	327,065	4.1	16,156	4.9
12. 과학기술	22,715	0.3	15,395	0.2	7,320	47.5
13. 예비비	37,580	0.4	50,070	0.6	△12,490	△24.9
14. 기타	567,184	6.5	527,469	6.5	39,715	7.5

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합계임

10

01 자원배분(3) :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II . 유형별 분석

☑ '22년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안은 5,411억원으로 편성(전년 대비 1,690억원 감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금성 복지예산의 중복지원 문제, 집행부진 사업 집행을 제고 필요

- 영아수당(210억원 / 신규), 아동수당(1,235억원), 행복키움수당(227억원)

구 분	영아수당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만0세 ~ 만1세	만0세 ~ 만8세	만0세 ~ 만2세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매월 10만원
비 고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도 자체사업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71억 9,200만원 / 국비20.9%, 도비 67.8%, 기타 11.4%)

→ 사업 지원 대상 증가 및 사업량 증가로 2021년 1회 추경 대비 예산안 대폭 증액(총사업비 45.8%) 편성
→ 그러나 2020년 실집행률 56.2%, 2021년 10월 말 기준 실집행률 63.6%로 연례적 집행 부진
→ 사업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 독려 필요

☑ '22년 보건분야 예산안은 2,379억원으로 편성(전년 대비 507억원 증가)

→ 특히, 지방의료원, 감염병, 자살예방 관련 예산 증가

☑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53억원으로 편성

→ 출연금 외 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의 통계목으로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의료원 지원액은 380억원으로 증가(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방의료의료원 기능특화사업 등)

11

01 자원배분(4) : 환경 분야

II . 유형별 분석

☑ '22년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 비중 감소, 폐기물·대기 부문 비중 소폭 증가

환경 분야 부문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예산액	538,325	556,922	389,649	362,814	9,888	23,309	112,776	135,418	15,430	17,928	10,582	17,453
비중	100	100	72.4	65.1	1.8	4.2	20.9	24.3	2.9	3.2	2.0	3.1

☑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교육 인프라 조성, 친환경차 보급, 상하수도 관련 예산 편성]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2021년 25억원 → 2022년 35억원 / 총사업비 198억원)

[연수원 기획설계 용역(2021. 10. 8. ~ 12. 6.) 실시, 2022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편성]

→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해 각종 절차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환경교육문화사업(5천만원)

[환경부 공모사업(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등)으로 도내 선정된 단체가 없어 2021년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 예정]

→ 도내 관련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예산 전액 삭감·불용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친환경차 보급(2021년 66,136백만원 → 2022년 66,306백만원 / 증170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이륜차·굴착기 구매 시 지원하는 사업이나 연례적으로 이월 물량 발생

- 하수도 관리 사업(2021년 1,964억원 → 2022년 1,997억원 / 증 33억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등의 사업이나 연례적으로 이월 발생

12

01 자원배분(5) : 교통및 물류·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II . 유형별 분석

- ☑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비중은 '21년 3.3%에서 '22년 2.9%로 감소
-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은 '21년 4.1%에서 '22년 3.9%로 감소

교통 및 물류·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자원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예산안	구성비	2021 본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교통 및 물류	254,585	2.9	266,740	3.3	△12,156	△4.6
도로	158,464	1.8	179,367	2.2	△20,903	△11.7
대중교통·물류 및 기타	96,120	1.1	87,373	1.1	8,747	10.0
국토 및 지역개발	343,220	3.9	327,065	4.1	16,156	4.9
수자원	98,676	1.1	108,963	1.4	△10,287	△9.4
지역 및 도시	215,028	2.5	198,805	2.5	16,222	8.2
산업단지	29,516	0.3	19,296	0.2	10,220	52.9

☑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건설공사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당진~서산(국지도 70호) 건설공사 사업(2017년 ~ 2027년/1,755억원(국비 780억원, 지방비 975억원))
 - 공사 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최근 4년간 사업비 이월액 과다 발생 (2017년 7억원, 2018년 165억원, 2019년 81억원, 2020년 20억원 등 3년간 273억원 이월)
 - 연도별 집행 가능 예산 편성 및 토지보상비 등 집행 잔액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편입토지 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 신속히 추진 필요

13

02 세입예산안

II . 유형별 분석

- ☑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 2조 8,160억원, 이전재원 4조 6,241억원, 지방채 1,527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72억원으로 구성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 비중이 36.0%로 전년 대비 2.2%p 증가
 -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이전재원 비중은 59.1%로 전년 대비 2.3%p 감소
- ☑ '22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안은 2조 7,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824억원 증가(16.3%)
 - (취득세) '21년 9,353억원 ⇒ '22년 1조 1,544억원, (지방소비세) '21년 9,428억원 ⇒ '22년 1조 681억원 (지방교육세) '21년 2,578억원 ⇒ '22년 2,87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021년 1,141억원 ⇒ '22년 1,149억원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22 예산안		2021 본예산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률
합 계	78,200	100.0	72,259	100.0	5,941	8.22
자체수입	28,160	36.0	24,407	33.8	3,753	15.38
지방세수입	27,242	34.8	23,418	32.4	3,824	16.33
세외수입	918	1.2	989	1.4	△71	△7.18
이전재원	46,241	59.1	44,387	61.4	1,854	4.18
지방교부세	7,685	9.8	7,210	10.0	475	6.59
국고보조금 등	38,556	49.3	37,177	51.4	1,379	3.71
지방채	1,527	2.0	2,039	2.8	△512	△25.1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72	2.9	1,426	2.0	846	59.33

14

03 지방세 세입추계

II. 유형별 분석

- ☑ '21년도 취득세 세입예산은 '19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수부족 경험으로 '20년에 이은 보수적 전망 기조 유지 결과, '21년 제 3회 추경안에서 1,662억원 세입 증액
 - ('19) 낙관적 추계(추계오차: 115.6)로 인한 세수부족 ⇒ 추경을 통해 2,171억원 세입감액 결정
 - ('20~'21) 보수적 추계(추계오차: 90.4~92.5)로 인한 초과세수 ⇒ 추경을 통해 세입증액 결정
- ☑ 보수적 세입예산 편성은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고, 낙관적 세입예산 편성은 '19년과 같이 세수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필요
 - 세입전망의 객관성·정확성 제고를 위한 세수추계 자문회의 신설 등 다각적 조치 마련 필요
 -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역시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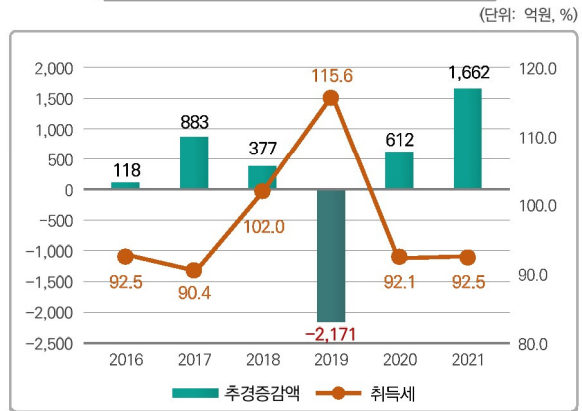
세목별 세수추계 오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득세	92.5	90.4	102.0	115.6	92.1	92.5
등록면허세	95.4	98.8	96.3	100.6	97.4	99.2
레저세	98.5	90.0	92.0	101.3	345.4	79.3
지방소비세	96.3	92.2	93.2	82.2	96.7	100.0
지역자원시설세	99.3	95.7	88.6	96.0	101.7	100.0
지방교육세	92.4	95.5	100.9	105.1	93.0	97.0

주: 세수추계 오차 = $\frac{\text{본예산액} \times 50\% + \text{최종예산액} \times 50\%}{\text{결산액}} \times 100$

취득세 추계오차 및 추경증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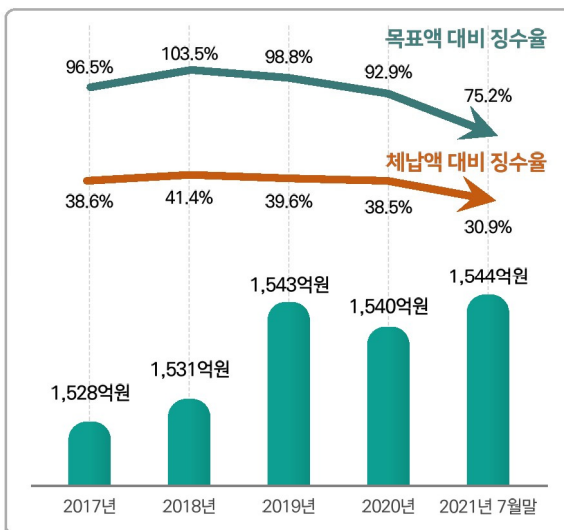
15

04 지방세 체납액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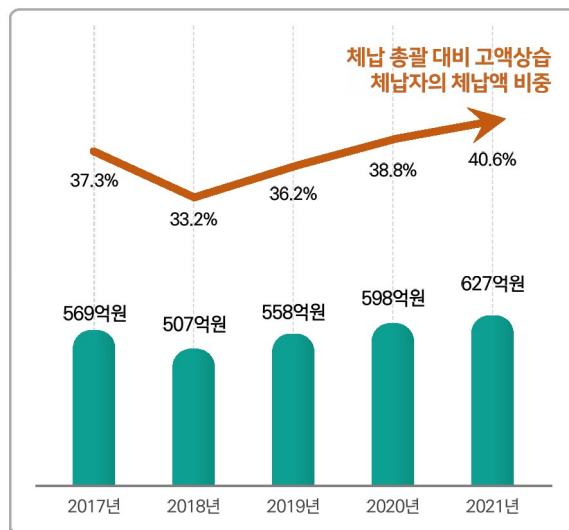
II. 유형별 분석

- ☑ '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544억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30.9%에 불과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가상자산, 각종 채권 등의 재산 파악·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필요
 -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추진 검토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



16

05 예비비 : '21년 625억원 → '22년 389억원

II. 유형별 분석

- ☑ '22년 예산안 예비비는 전년 대비 236억원 감소한 389억원으로 편성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275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원,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3억 5,400만원
- ☑ '20년 결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기준 미흡,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나타났으므로 '22년에는 주의 필요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코로나19대응 사업비를 일반예비비로 집행(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0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지출을 제한
- ☑ 의회의 예비비 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의 전용과 같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 노력 필요

2018~2022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명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합계	예산액	212,963	45,453	31,842	34,328	62,486	38,854	5.5
	집행액	90,478	7,385	5,663	24,760	52,670	0	-
	집행률	42.5	16.2	17.8	72.1	84.3	0.0	-
일반회계	예산액	171,965	33,891	10,372	29,769	60,433	37,500	45.7
	집행액	89,543	7,227	5,636	24,010	52,670	0	-
	집행률	52.1	21.3	54.3	80.7	87.2	0.0	-
특별회계	예산액	40,998	11,562	21,470	4,559	2,053	1,354	△20.5
	집행액	935	158	27	750	0	0	-
	집행률	2.3	1.4	0.1	16.5	0.0	0.0	-

자료: 2018~2020회계연도 결산서, e-호조 집행현황, 2022년 세출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7

06 도정현안사업 추진(POOL예산) : '21년 22억원 → '22년 19억원

II. 유형별 분석

- ☑ 도정현안사업 추진 사업(POOL예산)은 집행부서나 집행내역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며, 의회의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정부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므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POOL예산은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 등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족재원을 보전하여 재정부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편성(법적근거는 없음)
 - '20년 결산, 총 24억 3,700만원 중 21억 5,900만원 집행(88.6%), 2억 6,800만원 불용
 - 사무관리비 중 광고비 비중(34.4%) 가장 크고, 예산담당관실·건설정책과 등 특정부서에서 연례적 집중 집행 경향
 - 충청남도의 POOL 예산 규모는 17개 시도 4위(규모 및 본예산 대비 비중)로 높은 상황
 - '21년(21. 11. 15.기준)은 총 21억 9,100만원 중 17억 7,800만원 집행(81.2%)
 - 국내여비 2억 3,000만원 중 1억 700만원 집행(46.5%), 행사실비지원금 3,600만원 중 300만원 집행(8.9%)으로 불용이 예상됨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미조치

2022년도 POOL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1			2022 예산안(B)	증감	
			본 예산	추경 증감액	합계(A)		금액(B-A)	증감률(B-A)/A
합계			2,213	△22	2,191	1,915	△276	△12.6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소계	201	0	201	162	△39	△19.4
		사무관리비	0	0	0	17	17	순증
		연구용역비	176	0	176	145	△31	△17.6
		기타보상금	25	0	25	0	△25	순감
예산담당관	도정 현안사업 추진	소계	2,012	△22	1,990	1,753	△237	△11.9
		사무관리비	1,105	0	1,105	939	△166	△15.0
		행사운영비	315	0	315	284	△31	△9.8
		국내여비	230	0	230	195	△35	△15.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6	△22	304	302	△2	△0.7
		행사실비지원금	36	0	36	33	△3	△8.3

자료: 2022년 세출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8

07 출연금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 '18년 1,045억원 → '22년 2,174억원

II . 유형별 분석

☑ '22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1,140억원으로 '18~'22 동안 16.3% 증가

- 충청남도 세출결산액 대비 출연금 비율('20년 결산 기준)은 1.3%로 세종(1.8%), 서울(1.7%), 대전(1.6%), 경기(1.6%)에 이어 17개 자치단체 중 다섯번째로 높음
- 출연금 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증가속도 등 동태적 지표를 함께 살펴볼 필요
- '13~'20년 출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충청남도가 16.7%로서 17개 자치단체 중 세종(62.7%), 서울(26.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2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안은 각각 638억원, 396억원으로 '18~'22 동안 연평균 43.3%, 10.0% 각각 증가

- 특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21년 399억원에서 2022년 638억원으로 큰 폭 증가

☑ 공기관 위탁사업비 및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청남도는 출연금 동의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검토 과정에서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출연금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출연금	62,354	63,080	105,178	111,658	114,017	16.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150	18,722	32,204	39,908	63,836	43.3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7,036	19,410	26,611	29,607	39,621	10.0
합 계	104,540	101,212	163,993	181,173	217,474	20.1

19

08 학술연구용역 : '21년 81억원 → '22년 61억원

II . 유형별 분석

☑ '22년 학술용역 예산은 '21년 대비 20억원 감액 편성(28개 부서, 44건, POOL예산안 포함)

☑ '20년 결산, 67개의 학술연구용역 중 34개 과제는 연도 내에 완료하였으나, 33개 과제는 '20년 12월 말까지 미완료 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 이월된 학술연구용역 33건(59억 6,900만원) 중 명시이월은 31건(56억 9,300만원), 사고이월은 2건(2억 7,600만원)임
- '20년 이월률은 49.3%로 2019년(40.3%, 이월 23건/총 용역 57건) 대비 9.0%p 상승

☑ 학술연구용역 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적시성 있는 정책지원을 할 필요

- 추경을 통한 연구용역비 편성 관행에 기인하여 2020년 추진한 학술연구용역 과제 67개 중 33개 과제가 연도 내에 종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의 이월을 이용한 사업 추진은 결산 시점에서 재정투입의 성과 측정을 어렵게 하여 학술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성과 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연구용역 추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

2020년 학술연구용역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총 발주	2020년 완료	2021년 완료
용역 건수 (비중)	67 (100.0)	34 (50.7)	33 (49.3)
계약액 (비중)	8,648 (100.0)	2,679 (31.0)	5,969 (69.0)

주: 다음연도 이월 용역 33건 중 명시이월 31건, 사고이월 2건임

20

09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보전금 : '21년 180억원 → '22년 200억원

II. 유형별 분석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 보전금 예산은 '21년 180억원에서 '22년 200억원으로 증가

- '20년 결산, 이차보전금 30억원에 대한 집행액은 4억 5,600만원으로 집행률이 15.2%로 저조
- 이는 기금금고(국민은행) 융자협약서에 따른 협약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산출하는 지급액이 적었고,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의 이용률이 낮아진 데 기인

이자보전금 산출방식

- ①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대출잔액 × 기금범위 내 협약금리* × 일수 / 365) * 정기예금 수신가중평균금리 + 기금관리은행수수료 + 대출은행취급수수료
 ② 기금운용 이차보전금(기금운용평잔 × (기금범위 외 협약금리** - 기금범위 내 협약금리) × 일수 / 365)
 ** 한국은행 최근1년간중평균금리 + 기금관리은행수수료 + 대출은행취급수수료
 * 국민은행에서 청구하는 최종 이차보전금은 상기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양수(+)면 기금은행에 그 금액만큼 지급하고 음수(-)면 지급하지 않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 보전금 지출은 기준금리 변동과 연동되므로 지출액 추계 시 2022년 금리 전망치에 정확성을 기함으로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020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보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적요	2020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2회추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계	13,000	13,000	13,000	9,158	70.5	0	3,842
	이자보전금	3,000	3,000	3,000	456	15.2	0	2,544
	이자보전금	10,000	10,000	10,000	8,702	87.0	0	1,298

21

10 연구개발 장비 : '21년 24억원 → '22년 205억원

II. 유형별 분석

충남테크노파크의 '21년 연구개발 장비구입비는 24억원, 장비가동률은 18.3%에 불과

- 충남테크노파크는 도내 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사전조사와 장비가동률 저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비활용률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
- 센터별 보유장비 현황과 활용방법 등을 충분히 홍보하고, 장비에 생소한 기업체에는 교육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체의 원활한 장비사용 요구에 부응

2021년 충남테크노파크 연구개발장비 구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센터명	장비명	구입금액	장비 가동률	장비 대여료
합계			2,377	18.3	7
1	바이오센터	보행 및 재활 운동 시스템	215	26.9	0
2		자세균형 측정평가 및 척추기능 회복 훈련 시스템	145	26.9	0
3		인지/기능복합훈련시스템	165	24.2	0
4		신체/사고 인지 훈련 시스템	105	24.2	0
5	디스플레이 센터	액정 주입 및 합착장비	278	9	0
6		원자현미경	116	28	2
7		엘립소미터	182	19	0
8	자동차센터	전자기 간섭 및 정전기 확인 장비	284	33.1	3
9	이차전지센터	BMS 제어로직 분석 및 결함검출 SW	235	0.0	0
10		Mobile type BMS복합환경시험기	242	0.0	0
11		방폭룸챔버	412	10.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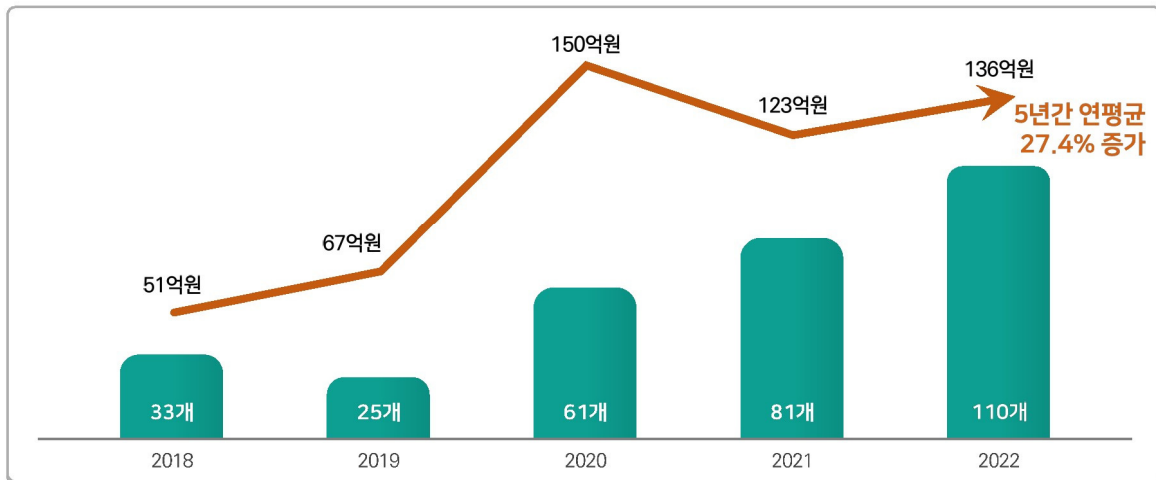
22

11 도민참여예산 : '18년 29억원 → '22년 55억원

II. 유형별 분석

☑ '17년 제도 도입·운영, '19년 제안사업 공모 추진, 규모나 도민의 관심 측면에서 조금씩 확대

- '20년 결산, 61개 도민참여예산 사업 중 12개 사업(19.7%)에서 실행행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남
Ex) 실행행률 10% 미만 사업: 충남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아카데미 (0%),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0%), 다시 찾고싶은 활기찬 전통시장(3%), 천안 세성산 생태역사공원 조성(7%) 등 12개 사업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관리 노력 필요(부진 사유: 이월, 수요부족, 예산 미편성, 사업취소연기)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도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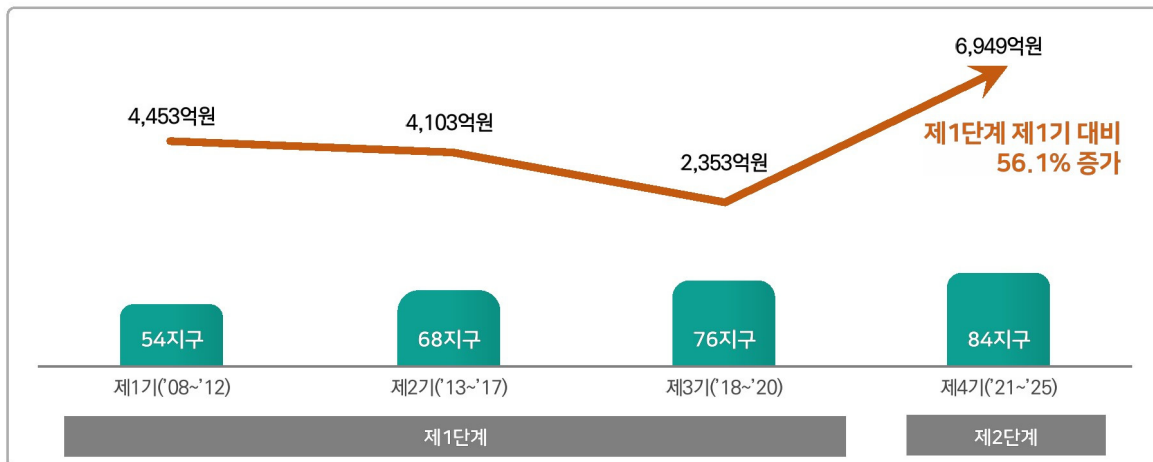
23

12 균형발전사업 : '08년 584억원 → '22년 453억원

II. 유형별 분석

☑ 저발전 시군(공주, 보령, 청양 등 8개 시군)에 대한 성장동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사업

- '20년 결산,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행행률이 62.7%로 저조
 - 시군별 집행률은 금산 90.4%, 보령 82.1%, 서천 80.2%, 공주 78%, 태안 58.6%, 논산 58.4%, 부여 51.4%, 청양 28% 순
 - 논산시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6.2%, 청양군 '천장호 생태관광 기반구축' 사업 2.7% 등
- 제3기 사업 실행행률 저조, 부진사유 분석 및 사업별 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 연차별 사업평가 등을 통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적용, 미흡한 시군에 페널티 적용 등



24

13 학교급식지원사업 : '21년 573억원 → '22년 607억원

II . 유형별 분석

- ☑ 학교급식지원 사업 예산은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사업으로 구성

★ 충청남도 학교급식(무상, 친환경)이력 :
초등학교(2011년) → 중학교(2012~14년) →
유치원(2018년) → 고등학교(2019년)
→ 어린이집(2020년)

- ☑ 학교급식에 대한 재원분담은 '14년 이후 충남도가 식품비를 지원하고, 충남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유지

→ 충남(59.3%)의 부담비율은 전국 평균(41.4%)에 비해 17.9%p 높음
→ 타 시도는 식품비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도 교육청이 일부 부담하는 체계로 운영

- ☑ 타 시도 식품비 및 친환경농산물 부담비율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재원분담을 논의 필요

2020년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급식비(식품비+인건비+운영비+친환경) 재원분담 비율				
	합계	지자체			교육청
		소계	시도	시군구	
충남	100.0	59.3	22.9	36.5	40.7
서울	100.0	49.9	29.5	20.4	50.1
부산	100.0	41.1	31.6	9.5	58.9
대구	100.0	33.2	30.2	3.0	66.8
인천	100.0	42.4	26.1	16.3	57.6
광주	100.0	30.8	27.6	3.2	69.2
대전	100.0	53.4	42.4	11.0	46.6
울산	100.0	31.1	21.0	10.1	68.9
세종	100.0	50.0	50.0	0.0	50.0
경기	100.0	50.5	15.6	34.9	49.5
강원	100.0	31.9	16.0	16.0	68.1
충북	100.0	40.2	13.1	27.1	59.8
전북	100.0	47.2	22.2	25.0	52.8
전남	100.0	38.0	14.4	23.6	62.0
경북	100.0	37.9	10.8	27.0	62.1
경남	100.0	30.5	13.1	17.4	69.5
제주	100.0	36.4	36.4	0.0	63.6
평균	100.0	41.4	24.9	18.7	58.6

25

14 유사·중복사업(1)

II . 유형별 분석

- ☑ 중장년 여성일자리사업, 신중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도민참여예산)

신규편성(여성가족정책관) (취업지원 전담센터 운영비(2,000만원), 시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7,500만원))

→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 지원 사업(여성가족정책관)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노인복지과)과 유사중복 우려
→ 중장년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유사한 측면,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및 통합 추진 필요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 지원 사업 비교

구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새일센터 지정운영
소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총사업비	841백만원	5,341백만원
사업시행주체	3개 시군(천안, 보령, 논산)	10개 시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내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사업 등 수행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중장년 일자리사업 관련 유사·중복 사업

구분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소관부서	저출산보전복지실 노인복지과	
총사업비	240백만원	6,556백만원
지원대상	예비노년세대(만50~64세)	신중년 50명
사업내용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 일자리창출, 교육,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등(사업비 90백만원)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 병원치료 조력 서비스 20명, 취약계층 학습지도 서비스 30명

26

14 유사·중복사업(2)

II. 유형별 분석

☑️ 걷주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9,000만원 신규 편성(체육진흥과)

- 동 사업과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사업은 운영방식(재원부담, 운영방법 등)에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사업목적 등 사업영역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인센티브 지급은 사업의 참여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나, 증가하는 재정부담 측면에서 지급한도액 설정 등 지속가능한 보상체계 구축 및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이 필요함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사업과 걷주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비교

구분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걷주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도민 걷기운동을 통한 건강인식 향상으로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구축	'걷주'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유도로 전 도민 건강증진 도모
2022년 예산안	6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백만원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
재원비율	도비 100%	도비 20%, 시군비 80%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주체	민간대행(충청남도체육회)	시군시행(15개 시군)
사업내용	충청남도민 걷기 운동 활성화, 어르신 건강인센티브 운영	시군별 걷주 챌린지 홍보비, 이벤트비 매칭 지원

☑️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3억원 신규 편성(문화정책과)

- 충청남도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충남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사업과 기능이 중복, 충분한 검토 필요 (2021년 예산: 13억 8,100만원, 2022년 예산안: 14억 3,800만원)

27

15 통계목 설정 오류 사업

II. 유형별 분석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통계목 변경 필요

- 신규 편성한 5개 사업에서 통계목 설정 오류(경상보조 ⇨ 자본보조, 자본보조 ⇨ 경상보조)

2022년 예산안 통계목 변경 필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통계목)	2021			2022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	합계(A)		금액(B-A)	증감률(B-A)/A
자치 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시군 봉사회 기능보강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금)	0	0	0	55	55	순증
체육 진흥과	서천군 파크골프장 기능보강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금)	0	0	0	12	12	순증
	홍성군 회원중독단체 기능보강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금)	0	0	0	25	25	순증
	홍성군 그라운드 골프협회 기능보강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금)	0	0	0	10	10	순증
	직산 들깨 소비촉진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0	15	15	순증
농촌 활력과							

28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I 재정총량 분석

I 01 재정규모

I . 재정총량 분석

- ✔ '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4조 5,222억원 규모로 편성
- ✔ 최근 5년간('18~'22) 재정 규모는 연평균 8.2% 증가, '15~'17년(5.3%) 대비 확대

2016~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재정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15~'17	'18~'22
합 계	28,836	30,685	33,200	35,216	37,586	37,911	45,222	-	-
전년비	4.1	6.4	8.2	6.1	6.7	0.9	19.3	5.3	8.2
교육비특별회계	28,525	30,295	32,637	34,516	36,142	35,075	42,349	-	-
전년비	3.7	6.2	7.7	5.8	4.7	△ 1.6	19.1	5.8	7.0
기 금	311	390	563	700	1,444	2,836	2,873	-	-
전년비	31.2	25.4	44.4	24.3	106.3	96.4	1.3	28.3	54.5

주: 예산안 기준

I 02 통합재정수지

I . 재정총량 분석

☑ '21~'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1,278억원 흑자

- 통합재정수입은 이전수입이 전체총수입의 97.4%로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재정 운영, 2025년까지 연평균 3.8% 증가
- 통합재정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지출이 전체지출의 96.3% 차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4.8% 증가

2021~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수지 전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정치	추정치	추정치	추정치	추정치
총수입(A+B)	3,902,716	4,852,377	5,029,423	5,153,072	5,288,581
순수입(A)	3,764,064	4,711,856	4,890,735	5,021,475	5,164,993
보전수입(B)	138,652	140,521	138,688	131,597	123,588
총지출(C+D)	3,902,716	4,852,377	5,029,423	5,153,072	5,288,581
순지출(C)	3,750,507	4,584,054	4,796,321	4,956,202	5,126,829
보전지출(D)	110,559	268,323	233,102	196,870	161,752
통합재정수지(A-C)	13,557	127,802	94,414	65,273	38,164

주: 2022~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추정치

31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II 유형별 분석

01 세입예산안

II . 유형별 분석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조 2,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1억원 증가(19.1%)

- 이전수입은 4조 1,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73억원 증가(19.3%)
- 자체수입은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 감소(△11.3%), 기타는 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8.1%)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

과목		2021 예산액		2022 예산액		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554,800,486	100.0	4,234,912,000	100.0	680,111,514	19.1
이 전 수 입	소계	3,507,523,281	98.7	4,184,858,025	98.8	677,334,744	19.3
	중앙정부이전수입	3,064,899,679	86.2	3,704,216,392	87.5	639,316,713	20.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40,818,008	12.4	478,953,369	11.3	38,135,361	8.7
	기타이전수입	1,805,594	0.1	1,688,264	0.0	△117,330	△6.5
자 체 수 입	소계	5,477,205	0.1	4,858,035	0.1	△619,170	△11.3
	교수학습활동수입	29,600	0.0	633,554	0.0	603,954	2,040.4
	행정활동수입	1,125,213	0.0	934,588	0.0	△190,625	△16.9
	자산수입	351,087	0.0	368,841	0.0	17,754	5.1
	이자수입	3,916,617	0.1	2,744,776	0.1	△1,171,841	△29.9
	기타수입	54,688	0.0	176,276	0.0	121,588	222.3
기 타	소계	41,800,000	1.2	45,195,940	1.1	3,395,940	8.1
	전년도이월금	41,800,000	1.2	40,000,000	1.0	△1,800,000	△4.3
	금융자산회수	0	0.0	5,195,940	0.1	5,195,940	순증

33

02 자원배분(1) : 2022년 분야별 규모

II . 유형별 분석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조 2,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1억원 증가(19.1%)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조 9,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63억원 증가(35.9%)
- 평생교육은 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15.2%)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분야별 세출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2021 본예산(A)	2022 예산안(B)	증 감	
				금액(B-A)	증감률(B-A)/A
합 계		3,554,800,486	4,234,912,000	680,111,514	19.1
유아 및 초·중등교육	소계	1,438,128,779	1,954,460,410	516,331,631	35.9
	인적자원운용	35,411,618	34,577,406	△834,212	△2.4
	교수학습활동지원	233,387,035	337,863,233	104,476,198	44.8
	교육복지	255,542,239	276,384,192	20,841,953	8.2
	보건급식	22,580,429	59,849,737	37,269,308	165.1
	학교재정지원관리	646,824,525	653,177,080	6,352,555	1.0
	학교시설여건개선	244,382,933	592,608,762	348,225,829	142.5
평생교육	소계	7,961,295	9,168,223	1,206,928	15.2
	평생교육	7,961,295	9,168,223	1,206,928	15.2

34

02 자원배분(2) : 2022년 분야별 규모

II . 유형별 분석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조 2,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1억원 증가(19.1%)

- 인건비는 2조 1,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5억원 증가(6.9%)
- 교육일반은 1,5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22.3%)
- 예비비는 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4억원 감소(△8.9%),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세출규모(계속)

(단위: 천원, %)

구 분		2021 본예산(A)	2022 예산안(B)	증 감	
				금액(B-A)	증감률(B-A)/A
교육일반	소계	123,041,738	150,536,763	27,495,025	22.3
	교육행정일반	41,568,283	63,468,282	21,899,999	52.7
	기관운영	47,011,135	63,616,356	16,605,221	35.3
	재무활동	34,462,320	23,452,125	△11,010,195	△31.9
예비비	소계	16,541,914	15,070,940	△1,470,974	△8.9
	예비비 및 기타	16,541,914	15,070,940	△1,470,974	△8.9
인건비	소계	1,969,126,760	2,105,675,664	136,548,904	6.9
	인건비	1,969,126,760	2,105,675,664	136,548,904	6.9

35

03 주민참여예산

II . 유형별 분석

☑ 주민참여예산 반영액은 '21년 19억원에서 '22년 300억원으로 281억원 증가

-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으로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예산편성 실현 필요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단위: 건, 천원, %)

연도	제안의건수			재정사업 반영 여부			비재정사업 수용 여부			예산반영액
	재정	비재정	계	반영	미반영	반영률	수용	불수용	수용률	
계	59	51	110	36	23	61.0	35	16	31.4	32,023,395
2022년	45	18	63	27	18	60.0	9	9	50.0	30,028,210
2021년	14	33	47	9	5	64.2	26	7	78.8	1,995,185

36

04 혁신학교지원

II. 유형별 분석

☑ '22년 예산안은 41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800만원 증가(12.4%)

- 참학력을 살리는 노력과 혁신학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 예산배정 방식과 사용의 자율성 확대, 장기적 효과성 검증,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20년 93교 ⇒ '21년 108교 ⇒ '22년 122교 로 확대

2021년 혁신학교 및 혁신동행학교 현황

(단위: 교)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고
계	744	25	411	185	114	9	
혁신학교	108	3	55	38	11	1	신규 16교 재지정 14교
혁신동행학교	636	22	356	147	103	8	

37

0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II. 유형별 분석

☑ '22년 예산안은 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소(△9.4%)

-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은 '19년 1,851명에서 '20년 2,006명, '21. 4월 1,407명 으로 증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문화체육비, 교통비, 식비 등 지원 확대 필요

연도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명)

연도	학교급	학생수	학업 중단자					
			계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
2021	소계	237,007	1,407	365	276	744	22	0
	초등학교	118,771	411	174	237	0	0	0
	중학교	59,514	228	189	39	0	0	0
	고등학교	56,671	768	2	0	744	22	0
	특수학교 등	2,051	0	0	0	0	0	0
2020	소계	237,361	2,006	470	448	1,077	11	0
	초등학교	120,115	535	194	341	0	0	0
	중학교	57,541	378	271	107	0	0	0
	고등학교	57,791	1,093	5	0	1,077	11	0
	특수학교 등	1,914	0	0	0	0	0	0
2019	소계	240,715	1,851	428	353	1,016	54	0
	초등학교	122,424	464	178	286	0	0	0
	중학교	56,031	315	248	67	0	0	0
	고등학교	60,433	1,072	2	0	1,016	54	0
	특수학교 등	1,827	0	0	0	0	0	0

38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토론

김 연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마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최두선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진 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

김효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2021년 행정감사 결과를 반영한 2022년 예산심사 제안

김 연(충청남도의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1. 민간보조금 정산 및 반납 규정 준수

- 민간보조금 정산 문제는 2019년부터 도정질문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수준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개선의 노력도 문화정책과에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뿐 타부서에서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예산심사에서 2020년 사업 보조금 미정산 및 미반납 단체에는 차기년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함. 실제 미정산 단체는 정산을 완료한 이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일부 국비가 포함되어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이던 단체는 21년도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확인 절차를 거쳐 미정산 상태라면 예외 없이 2022년도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임.
- 보조금 지원 및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함. 일부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업유형과 양이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예산을 20~30% 이상 증액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대상에게 사업비가 지원된 경우가 있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다고 보여짐.

2.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센터, 예산안 검토 필요

- 민선 7기에 들어서 센터 및 진흥원 등 기존의 출연기관 성격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나 진흥원이 늘어남. 대부분 중간조직 성격이라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충남에너지연구센터의 경우 인건비에 비해 간접사업비가 많고 직접사업비는 집행율이 매우 저조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함.
- 2021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분석하여 인건비만 과도하게 나가고 사업비는 주로 간접사업비에 집중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센터나 진흥원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특히 출연기관 산하의 부설기관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직원 채용을 하다보니 이직율이 높아져 업무역량의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3년 연속 신규사업 정체, 실효성 없는 사업은 일몰 처리 필요

- 대규모 복지사업으로 복지예산의 증가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으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3년 연속 신규사업 대한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대적 흐름을 타지 못하거나 정체감을 줄 수 있어 도민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환이 필요함.
- 충남테크노파크 연구개발장비 운영 사업은 2021년에 총 23억 7700만원을 들여 11대의 연구개발장비를 구입했지만 장비가동율은 18.3%에 그쳤으며, 총 7대의 장비만 대여가 되어 당초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 낭비가 되고 있음. 기존에 구입한 개발장비의 가동율이 약42%임을 볼 때 21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충남 도내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장비구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46억 97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 그러나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재난상황 발생 시 이미 재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뉴스 속보 등 다양한 매체가 재난 상황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평가

조철기(충청남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

-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국가지원 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사업에 대한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충남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로 인한 재정 건전성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2022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4조 2,349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산액 3조 5,548억 48만원 대비 19.1%인 6,801억 1,15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2022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방역, 방과 후학습, 돌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대응 예산을 우선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며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사업, 미래 교육 기반 조성과 내실화 사업,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교육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 과밀학습 해소, 직업계고 지원,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학교 방역 지원, 유·초등 돌봄지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입은 정부의 재정책장정책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20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9% 증가하였고 특히, 보통교부금은 22.5%인 6,345억 8,884만원 증액되어 3조 4,551억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 증가 등 경상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증액된 6,801억원 중 인건비 1,365억 4,890

만원, 유아및초중등교육 5,163억 3,163만원, 평생교육 274억 9,50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전년도 대비 142.5%인 3,482억 2,582만원 증액된 5,926억 8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사업, 공간혁신 등 대규모 시설 투자로 보여집니다.

□ 교육청 주요사업 내역

- 지금까지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지역 업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2022년 주요사업 내역은 **교육결손 회복 지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내실화, 교육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 **교육결손 회복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유대감 약화 등 학습결손 해소, 기초학력 보충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내실화**는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 안전망 구축**은 무상교육 완성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 지원, 방역인력 및 물품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 다만, 원격·미래교육을 위해 대량으로 구매한 스마트 기기와 구축된 정보화 환경은 주기적(내용년수 5년)으로 교체-개선이 필요로 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고교학점제 사업, 공간혁신 등 대규모 시설사업은 다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여 향후 건축 재정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2020.06.10.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기금 조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언

-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4조 2,349억 1,200만원 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5%에 달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전환 등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2022년 예산이 19.1%인 6,801억 1,151만원을 증액하여 AI융합기반구축 사업 등 129개 사업, 301억 1,690만원을 신규 사업을 발굴·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교육가족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피부에 체감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산편성 시 매년 틀에 박힌 반복과 답습을 탈피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피드백과 평가를 거침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 학부모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교육사업 추진시 교육수요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교육사업 중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위학교사업선택제운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특별하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나, 예산이 없어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학교당 1개의 사업을 신청하면 교육청은 이를 심사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기존 공모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 금번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7,08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학교사업선택제 대상교가 168교에서 250교로 확대하고 교당 지원 단가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단위학교 사업선택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단위학교 사업결정 자율권 확대, 목적사업비에 의한 공모사업 비중 축소,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단위 학교 업무경감,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신청-접수-정산보고 등의 절차를 별도 공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위학교사업선택제운영 사업비를 본 예산편성시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1] 단위학교사업선택제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정책기획과	단위학교사업선택제운영 (협의 및 운영)	13,000	27,200	△14,200
	단위학교사업선택제운영(누리집 유지관리)	10,000	0	10,000
	단위학교사업선택제운영(학교 전출금)	5,000,000 (250교)	2,925,000 (168교)	2,075,000
합 계		5,023,000	2,952,200	2,070,800

2. 학교급식환경개선

- 2022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기 불량으로 급식실 조리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으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튀김과 볶음요리 경력이 길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34배까지 높아지며, 조리시간이 길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3.17배 높아진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환기시설 관련 기준을 보면 후드 형태 및 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전무하다” 며 “교육당국은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실 환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실 환경에 맞는 환기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 2022년도 본예산에 [표 2]와 같이 150교에 2천만원씩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학교에 대한 급식실 환기실태 점검방안과 금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표 2] 급식실환경개선 환기기구 구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체육건강과	공립초	20,000,000원 × 30교 =	600,000	0	3,000,000
	공립중	20,000,000원 × 30교 =	600,000		
	공립고	20,000,000원 × 30교 =	600,000		
	사립중	20,000,000원 × 30교 =	600,000		
	사립고	20,000,000원 × 30교 =	600,000		
	합 계(150교)		3,000,000		

- 또한,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근거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로 급식관계자의 건강 보호·증진하고자 73교에 대하여 급식실공기청정기임차 사업으로 1,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식실 환기장치와 더불어 급식실 공기청정기 사업이 급식실 공기질 개선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많은 서천, 보령, 태안, 당진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 도내 확대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 3] 예산교육지원청 급식실공기청정기임차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예산 교육지원청	공립유	24,000원×10개월×2교=	480	17,520	0
	공립초	24,000원×10개월×42교=	10,080		
	공립중	24,000원×10개월×12교=	2,880		
	공립고	24,000원×10개월×6교=	1,440		
	사립중	24,000원×10개월×3교=	720		
	사립고	24,000원×10개월×8교=	1,920		
	합 계(73교)		17,520		

3.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운영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써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생 수업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44.3%인 14억 3,536만원을 증액한 24억 2,9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표 4]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2024	2025	2026
1학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체 고교	
2학년							
3학년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선도학교운영¹⁾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²⁾으로 되어 있으며,
- 2025년 전면도입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성공여부는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개설을 통한 개별학생에 대한 성취수준의 향상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에 비해 인프라 부족으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다양한 과목개설이나 전문적 인력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최소 성취수준(이수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4. 직업계고현장실습지원

-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위하여 현장지도점검비, 현장실습운영비, 안전용품구입비로 전년도예산 대비 6.3%인 4천 201만원을 증액한 7억 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표 5]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통계목	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미래인재과	현장실습지원	330-05	100,000,000원×1식=	110,000	
	현장실습지원	620-03	14,351,000원×28교=	408,960	
		620-10	14,351,000원×9교=	146,050	
	안전용품지원	620-03	730,000원×28교=	25,792	
		620-10	730,000원×9교=	9,210	
	합 계			700,012	

- 직업계고등학교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³⁾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학년 2학기에 산업체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진로·학업 설계지도,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2) 학점제 운영모델 개발, 연구선도학교 및 선도지구, 교과교실제 운영교 컨설팅 등 지원체계 구축

3)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의미함

- 2017년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6일에도 여수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현장실습과 관련한 사고예방사업의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결론

-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고자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풀렸던 유동성이 회수되고 내년 이후부터 한국 및 글로벌 경기는 긴축재정으로 선회하여 세수가 감소하고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조정으로 202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우려되어 교육재정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확장적 재정운영기조를 건전한 재정속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확대를 통하여 재원을 비축하고 앞으로 긴축 재정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필수사업의 선별작업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노력과 학생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행·재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림축산분야 예산안 도의회 심사방향 제안

강마야(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농정예산과 농업보조금의 한계점

○ 농정예산의 구조와 한계(강마야, 2017;강마야 외, 2016)⁴⁾

- 농산촌 부문보다 농림업 부문에 집중하는 산업중심적 예산 구조(70% : 30%)
- 농업과 농촌을 보조하고 육성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시혜적 관점으로 접근)
- 정책개입 영역의 일관성 부족(다양한 영역에 많은 사업개수, 사업 당 적은 평균예산, 집행자 및 수혜자가 만족할 수 없는 구조, 예로서 내역사업만 약 1,179개)
- 농정목표와 정책수단(예산) 간 불일치(농정목표는 ‘농가소득 향상 및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관련 예산은 감소)
- 재원배분의 균형성 부족(농촌정책보다 농업정책 중심 농정, 기반확충 포함한 생산 등 특정영역에 높은 재원배분, 쌀과 축산 중심의 특정품목에 높은 재원배분)
-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방식(타 분야 대비 농정분야 보조사업 개수 및 예산규모 1-2위 차지,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방식 구조)
- 정책영역과 주체별 역할 간 일치성 부족(생산 영역에 개별 농어업인 다수를 집중 지원하는 구조이나 그에 상응한 역할과 의무 부여 부족, 시장(기업) 참여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기반, 정부 불균형적인 재원배분과 과도한 정책개입)

☞ 농정예산 개편 논의를 위해서는 민관이 동시에 예산구조 문제인식 공감대 형성,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 사업군을 대상으로 평가와 집행방식 변화 모색, 충남 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 축적, 농정예산을 포함한 농업·농촌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총망라하고 기초통계와 연계하면서 집행-관리-평가-환류-모니터링을 하는 ‘정책관리 체계 구축’ 필요

4) 자료 : 1. 강마야(2017), 농정예산 실태분석과 개편 방안, 충남리포트 265, 충남연구원.

2. 강마야·김찬규(2016), 충남의 농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 전략연구 2016-43, 충남연구원.

○ 농업보조금의 구조와 한계(이관률 외, 2014;한국농촌사회학회, 2014;강마야 외, 2012)⁵⁾

- 제도 및 환경 측면에서는 WTO 규정 상 감축보조에 해당하는 농업보조금 비중이 높고 다수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 존재(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투입 측면에서는 융복합형 사업비중 낮은 반면, 생산기반시설투자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생산영역 사업비중 높은 구조(다만, 최근 농어민수당, 여성농민 바우처 지급,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등 직접보조 비중 증가 추세)
- 집행 측면에서는 정책영역이 생산요소 투입지원과 경영소득 지원으로 국한되어 장기간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기간은 1년이라는 구조. 농업보조금 정보의 불투명성 제기,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지원 등 사업대상자 기준 선정의 불공정 제기
- 성과 측면에서는 대부분 성과지표가 없고 사업목표와 수단 간 불일치하는 구조, 생산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시장가격구조 왜곡 현상 유발 문제
- 환류 측면에서는 통제수단과 사후평가제도 미약,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

☞ 농업보조금은 제도 및 환경, 투입, 집행, 성과, 환류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비합리적인 정책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농업보조금은 정책방향의 명확화, 정책목적의 구체화, 정책집행의 효율화와 투명화, 정책수단의 연계화 및 통합화, 농업정책의 지방분권화, 농업보조금 영역 확대, 소프트웨어형 사업으로 전환, 성과평가 제도 도입, 정책성과 극대화라는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함.

5) 자료 : 1. 이관률.허남혁.강마야(2014), 농업보조금의 정책구조와 함의, 농촌사회 24(2), 한국농촌사회학회.
2. 한국농촌사회학회(2014),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
3. 강마야.이관률.허남혁(2012), 충남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전략연구 2012-16, 충남연구원.

□ 사업기획 및 계획 단계를 밝은 예산편성 여부⁶⁾

○ 예산편성 시 사업수행 여건 및 정확한 실태파악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와 질문

- 농림축산분야는 기본현황 및 실태조사가 없는 사업, 세부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생성된 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기획단계와 계획단계가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기획 및 계획단계를 착실히 밝은, 과학적 정책 프로세스⁷⁾ 도입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함.
- 농림축산분야에서 생산되는 통계는 정책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내용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근거로 사용하기에 신뢰성 측면에서 취약함.
- 예. 농산물생산정보프로그램 구축 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누가 어떻게 관리/유지/보수할 것인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다른 사업과 결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은 없는지 등 검토했어야 함.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실시예 따른 생산비 및 소득 실태조사, 생산량 예측과 결합해서 설계를 했어야 함. 그리고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관련 사업, 계약재배-계약수매를 통한 물량 규모화 및 농가조직화 관련 사업 등과도 결합해서 프로그램 설계를 했어야 함.⁸⁾

☞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실행하려는 것인가?, 현장의 정책수요 조사는 실시하였는가?, 어떠한 계층의 사람이, 어떤 부류의 조직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현장 실태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이 필요함⁹⁾.

○ 사업과 사업 간 체계화 및 사업의 계층구조 설계 여부에 대한 검토와 질문

- 농림축산분야는 유사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개별사업 분산 혹은 혼재되어 있는 양상, 즉, 개별사업 구조화(맥락을 가진 계층구조)가 부족한 편임.
- 사업과 사업 간 위계(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가 안 맞는 경우,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음.
- 상호 유사한 관련 사업 간 통합 및 위계화, 구조화 농정의 프로그램화 및 패키지화가 필요함.

6) 자료 : 강마야(2019), 충남 농림축산분야 예산사업 재정혁신 평가기준 및 분석,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7) 주 : 과학적 정책 프로세스란, 기획 및 계획단계, 예산반영 단계, 예산배정과 집행단계, 산출 및 성과단계, 평가단계 등 단계별 지침과 요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저자 주).

8) 주 : 예시로서 든 것일 뿐 해당사업 예산 개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저자 주).

9) 주 : 예산 심의단계에서 보통 사용하는 질문들은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투자 적정성, 경제성 등” 다소 추상적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문제인식을 명확히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 진술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음. 이하 동일함(저자 주).

☞ “(현재 정책사업명)농업·임업·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사업은 정책사업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진다고 보는가?, 이 사업이 어떤 점에서 농업·임업·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보는가?, 이 사업을 시행해서 농업·임업·축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 필요함.

□ 사업집행 과정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¹⁰⁾

○ 현장의 관리감독과 집행 등을 고려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와 질문

- (중앙부처 기준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 분야 다음으로 사업개수가 많은 분야가 농림축산업 분야로서 사업개수가 많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함.
- 사업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현장과 점점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예. 1개 내역사업 당 평균 10회~15회 공문서 및 보고문서 작성,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취합과 검토 등에 시간 할애).
- 국고 보조사업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유사 및 중복사업도 많기 때문에 절대수치 감소 불가피, 보조사업별 투입 및 집행-산출 및 성과-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든 구조, 보조사업 개수가 많아서 행정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힘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성과를 발휘하기 힘든 구조가 됨.
- 이는 현장과 점점 멀어지는 행정, 집행과정에서 현장 관리감독의 어려움, 사업목적과 사업성과 달성에 어려움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문제임.
- 아울러 사업개수 조정은 곧 재정개편을 의미,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융복합, 세부사업이 아닌 프로그램화 및 패키지화 방식으로 전환 유도, 융복합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개편 진행하도록 함.
- 예. 농식품 수출상품화사업, 국제식품박람회 개별 참가지원사업,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 농식품 수시 수출 상담회,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¹¹⁾
- 예.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경상비),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시설장비), 충남쌀 우수 브랜드 마케팅 지원, 충남쌀 유전자분석비 지원, 충남쌀 품질분석장비 지원 등¹²⁾

☞ “사업 성격과 영역 측면에서 유사 및 중복검토는 하였는가?,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다른 분야와 목적이 상충되지 않는가?(한쪽에서는 기후위기 대응한 환경오염저감 사업, 한쪽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사업개수는 몇 개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할 것인가?, 사업관리를 위해서 현장의 관리감독, 실사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 필요함.

10) 자료 : 강마야(2019), 충남 농림축산분야 예산사업 재정혁신 평가기준 및 분석,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11) 주 : 예시로서 든 것일 뿐 해당사업 예산 개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저자 주).

12) 주 : 예시로서 든 것일 뿐 해당사업 예산 개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저자 주).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공정성, 운영주체, 보조사업 집행방식에 대한 검토와 질문

- ① 공정성 : 농업보조금 수혜자 편중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정보 아는 이와 모르는 이의 격차 발생으로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 특정품목·특정농민·특정조직·특정단체·특정업체 등을 위시한 사업, 해당사업의 탄생과정부터 명확치 않은 기준으로 생성된 사업,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오고 있는 소모성·일회성 보조사업,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없는) 행사를 위한 행사경비 보조사업, 최근 대부분 농업보조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만이 가능한데 여성농민 및 불법임차농민 경우, 농지소유주가 등록 거부하는 경우 등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사각지대(계층)가 발생하는 문제 또한 심각함.
- ② 운영주체 :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법인 등이 우후죽순으로 형성되게 만드는 사업, 운영주체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은 사업 등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만듦. 농업인에 대한 수혜귀착 제고는 물론 농민들, 법인들의 자부담 및 자기결정권 강화해야 함.
- ③ 집행방식 : 보조사업 방식이 대부분이므로 보조금 지원을 하면 그 이후 관리는 사실 상 무방비 상태, 지역농업의 주체로서 지역 내에서 면단위 자율·자립 역량을 키워가는 사업방식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안 되고 있음. 지역실정을 반영한 집행방식 정비 필요, 시군의 집행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한지 파악하는 게 중요,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사업 수혜 받은 사업대상자 기본속성(규모, 이름, 소재지,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원 후 정량성과 및 정성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자립성을 갖도록 유인하는 방식, 보조금 지급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상시공개 등으로 이어지게 해야 함.

☞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가?, 보조사업별 홍보와 안내사업을 농민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해당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부류이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어떤 특정품목·특정농민·특정조직과 단체·특정 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는가?,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이력관리, 추적시스템은 구축하였는가?, 지원 후 사업대상자는 자립이 가능한 상황인가?, 지원 후 건강한 주체로 양성이 되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 필요함.

□ 사업성과 및 평가 단계를 고려한 예산편성 여부¹³⁾

○ 사업성과 및 평가를 고려한 제도와 환류방안 검토와 질문

- 사업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맞지 않고(불일치) 불분명하여 정량 통계관리 어려움.

13) 자료 : 강마야(2019), 충남 농림축산분야 예산사업 재정혁신 평가기준 및 분석,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 측정하기 쉬운 양적 지표가 아닌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질적 지표로 사용,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성과지표로 대체, 해당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왜 저조한지 수요자 의견조사와 수요자 욕구 파악 등도 성과지표로 인정,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국가에 제안하는 활동도 성과지표로 인정 등 방안 모색 필요함.
-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달성했으면 일몰제도 도입, 상호의무준수조건 강화, 정책수혜 귀착분석제도 도입, 사업별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도입, 사업별 기획과 계획-예산편성-집행과정-성과도출-제도개선-평가 및 환류 등 과학적인 정책 프로세스 도입, 정책목적-정책내용-정책수단-성과지표 일치성 제고 필수임.
- 예. 축산기반조성, 축산경영안정, 친환경축산조성, 동물복지관리 단위사업의 경우

단위사업	성과지표(도청)	측정산식	연구자 의견
축산기반조성, 축산경영안정, 친환경축산조성, 동물복지관리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한우 1등급 출현율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안전한 사육과정을 담보로 해야 하므로 관련한 지표보강 검토 필요, 사육과정별 섬세한 지표 마련 필요 (예. Non-GMO 사료 급여 여부, 항생제 미투여 여부, 중금속 미포함된 사료급여 여부 등)
	축산악취 최소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달성도(%) : 개선 응답자수*설문대 상×100	개선응답자가 누구인가(축산업자인가, 주민인가) 애매모호, 악취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관련한 성과지표 보강 검토 필요, 관리감독 실행여부 중요(예.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거와 처리 여부, 축사환경개선 주민의견 수렴 여부, 적정사육두수 유지 여부,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 및 악취측정망 설치와 체크 여부 등)

2022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견

최두선(공공재정연구원 원장)

☐ 충청남도 부채 등 재정상황에 대한 대책

- 22년 통합재정 수지에 대한 적자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 전년대비 607억원 적자 증가에 대한 대책, 5년간 적자폭 확대 문제
- 지방채무에 대한 대책
 - 지방채무비율이 13%로 채무비율 급격 증가에 대한 대책
 - 중장기 채무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 외부차입금 증가에 대한 대책

☐ 자원 배분에 대한 대책

-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경직성 심화 대책
- 탄소중립 및 기후 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원배분 확대 방안

☐ 예산 추계의 적정성

-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여부(교육비 특별회계 포함)
- 하반기 추경 예산의 과다편성, 과다 이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통계목 설정 오류 사업에 대한 문제점

☐ 민간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의 적정성

☐ 결산 결과의 예산의 피드백 문제

지역수요기반 산업·기업육성 및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

진 혁(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

□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충남’ 건설이라는 중점 과제가 잘 반영

- 복지 확대, 교육 지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촘촘하게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

□ 다만, 충남의 미래 비전을 이끌 전략적 투자 방향이 미흡하게 보임

- 충청권광역경제권(혹은 매가시티)을 선도할 전략과 투자 방향, 수도권 팽창에 따른 대체 전략지역으로서의 충남의 전략과 투자 방향 등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시점이 도래
- 송도, 판교에 버금가는 성장동력 도시 건설 등 공격적 전략이 필요

□ 경제, 산업 분야의 사업들이 균형발전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충남의 기반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자체 사업이 미흡

-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체 지역수요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개발이 필요
- 예를 들면, 농기계, 드론, 동물 면역, 사료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 육성 및 수요 창출(도에서 농민 및 축산민에 보급하고 지역기업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생태계 조성)

□ 우수 인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 사업 개발이 필요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 간 상생 프로그램 및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5060세대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
- 청년의 생활과 교류 공간을 고려한 도시 계획 등

도민참여 예산안 도의회 심사방향 제안

김효신(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1. 도민참여예산제의 개념 정의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시행 2020. 6. 10.]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상의 제도임

2. 도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인한 변화

1)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도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예산 편성을 지자체가 독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제안한 사업이 예산안으로 반영되기도 했음
- 하지만 도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비율은 극히 낮은 정도지만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었음

2) 의회와의 관계

- 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도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됨으로써 도민이 직접 참여한 예산안을 심의해야하는 불편함이 연출되고 있음
- 특히 심의 결과 예산안이 삭감·조정된 경우,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분을 삼은 물론, 해당 예산안을 공모한 시·군민으로부터 예산안 조정·삭감에 관여한 도의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선거를 앞둔 경우에는 입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뿐만 아니라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사업을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추적하고 확인하는 평가과정은 의회의 결산기능과 중복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음

3. 도민참여예산제와의 바람직한 역할의 재정립

1)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 현재의 모습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총액 150억은 충남도 본예산 총규모인 9조 3,801억 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또한 급격한 기술의 변화로 노동환경이 크게 변했고 그로인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환경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안의 편성과정은 주로 청사 내 탁상위에서, 현장성과 현실성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예산안에 담아내기는 매우 부족한 현실임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살림살이에 국민이 직접 관여한다는 정의는 재정 민주주의의 참 명제임
- 그러므로 예산안 편성에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재정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도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충청남도 예산은 도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미래의 도민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하며 최대의 효율성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도민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하며, 삶의 현장에서 쏟아지는 도민들의 욕구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수렴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 이러한 수렴도구로 전국 17개 시도, 243개 지자체 모두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역시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2) 도민참여예산위원회

ㄱ. 소개

- 2012년 처음 구성된 도민참여예산위원회는 현재 제4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100명의 도민참여예산위원과 15명의 예산연구회 위원들이 재정의 민주화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의 위원회임

ㄴ. 조례가 규정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① 삶의 현장에서 도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내 각 시군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담아내는 역할을 오롯이 수행해야 함
- 현재의 예산편성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 실제 도민들의 욕구가 고스란히 반영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현장성을 바탕으로 예산에 수렴하는 선도적,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에서 도민참여예산제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된 사업의 제안자로부터 제안이유를 직접 듣고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적 근거와 행정의 협조로 예측하고, 사후적으로는 도민참여예산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 확인 역시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② 교육의 필요성

- 예산편성은 무엇보다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그 목적성이 정당해야 함. 따라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질의 교육으로 위원들의 역량을 부단히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교육의 횟수만 늘리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위원들이 목말라하는 내용의 교육이 수시로 진행되어야 함

③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관심 증대의 필요성

- 올해 위촉받은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들도 매우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도청 실국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 지난 4월에 진행된 분과별 설명회에서는 각 실과를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읽듯이 자료를 읽어내는가 하면, 담당자로 배석한 직책은 과장도 아닌 팀장이 대부분이었음
- 뿐만 아니라 6월 말 개최된 분과별 민관협의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에 관해 주무 실과에서도 숙지하지 못한채 우왕좌왕 진행하는 모습은 오히려 위원들의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였음
- 또한 심의자료를 포함한 각종 회의 자료는 책자로 편집하여 우송되기보다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지고 있어 위원들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음

- 그나마 첨부 자료도 기한에 거의 다다른 시일이야 겨우 받아보는 경우도 허다하여 자료를 한번 훑어보기에도 물리적으로 부족함을 반복해서 겪고 있음
- 관련 실국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줄은 익히 알고 있지만 도민참여예산제의 성공과 실패가 지사님과 실국의 관심 정도에 달려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함

④ 도민참여예산사업의 이름과 성격에 맞지 않는 매칭비율의 수정

- 도민참여예산사업은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사업유형별 매칭비율은 다음과 같음
- 도 정책사업은 ▲도비:시군비 매칭이 5:5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과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은 도비:시군비 매칭이 7:3 아닌 3:7로 구성되어 있음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과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에 있어, 도비:시군비 매칭비율 3:7은 남의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임
- 가령 100만원 규모의 예산사업에 도에서는 30만원만 지출하면서 70만원을 지출한 시군을 관리 감독하고 그것도 모자라 명칭까지도 도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칭하며 진행하는 것은 분명한 언어도단이고 상급관청의 횡포임
- 당장에 매칭비율을 도비:시군비 매칭 7:3으로 수정하든지 100% 도비로 조정해야 시군 정책 결정자나 담당자의 의욕이 도민들의 욕구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기가 용이해짐

⑤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는 도민참여예산제의 훼손행위 절대금지

- 15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매년 예산사업 공모가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음
- 사업의 공모는 순수하게 해당 위원들이 각자가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시나 도의 공무원이주가 되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후 친분이 있는 예산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빌려 공모하는 경우가 있음
- 이는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나 충남도의 도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태이므로 금지되어야 함

⑥ 도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사업에 관한 분석 및 제언

a. 개요

- 지난해, 『2021년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 선정』되었으나 4건의 사업, 총 2,461,512,000원의 사업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재검토 사유로 삭감되었음
- 4건의 삭감된 사업은 도 정책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 시내버스 공기정화필터 설치사업¹⁴⁾ ▲충남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¹⁵⁾이며,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인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 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¹⁶⁾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어울림 사업¹⁷⁾임
- 지난 3월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 총회에서는 100명에 가까운 위원들이 이를 두고 매우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관련 위원회와 도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음
-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심의과정을 회의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b. 사안별 검토¹⁸⁾

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 시내버스 공기정화필터 설치사업

- 논의한 당시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회의록¹⁹⁾을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준비나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질의한 김대영의원도, 사업을 하는 건 반대는 안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라고 언급하고 있음
- 건설교통국장 역시 이계양 위원장의 질의에, 도민참여 사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실무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음

② 충남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 논의한 당시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회의록²⁰⁾에서, 김명숙 의원은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지금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지만 온 것 중에 부실해서 얼른 주문을 할게요. 도민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1건에 이만큼씩 서류가 돼요. 심사할 때 제출했던, 이걸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에서 제출했고 그걸 심사하고 거기에 딸린 회의와 평가하고 그거 가져 오세요. 그거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14) 예산액 1,677,000,000원 / 삭감사유 : 사업재검토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25회 제2차 회의록 참고

15) 예산액 584,512,000원 / 삭감사유 : 사업재검토 /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25회 제4차 회의록 참고

16) 예산액 150,000,000원 / 삭감사유 : 사업재검토 / 복지환경위원회 제325회 제3차 회의록 참고

17) 예산액 50,000,000원 / 삭감사유 : 사업재검토 /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25회 제4차 회의록 참고

18) 도 정책사업만 검토함

19)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25회 제2차 회의록 P.37-P.38, P.53-P.54 참고

20)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25회 제4차 회의록 P.26 참고

- 이에 농업기술원 김부성 원장은, 그게 정확한 상태가, 공동체지원국에서 안을 받아서 그쪽에서 심의한 다음에 우리 쪽에 넘어올 때는 한 장짜리 페이퍼가…….

c. 대책 강구

- 도민참여예산사업은 상기한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노력과 열정과 희망이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 예산편성 제도의 일환임
- 관련 사업을 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할 때는 심의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긴급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는 준비해야 함
- 따라서 철저한 분석과 자료준비는 물론 실국 간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이해도를 최대치까지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 전제임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실국장께서 이러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전심을 다해 당부함
- 심의과정에서 숨겨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업의 최초제안자와 의회의 심의 현장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임
- 이로 인해 회의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안자의 아이디어나 중요내용들이 제대로 의회에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최초제안자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관련 분과위원, 전문가와 관련 실국 담당자 그리고 도의회의 관련 분과 의원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디자인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들을 새롭게 꾸려서 거리 간격을 최소화해야 함²¹⁾

2) 도의회와의 관계

(1)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

- 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안도 심의할 권한이 당연히 있음

(2) 현재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모습과 위치

-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핵심인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은 이제 8년째로, 시스템이 겨우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잣대 그대로를 도민참여

21) 모든 사업에 적용하면 금상첨화지만 물리적 여건의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 규모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예산 공모사업에 적용하면 겨우 8살밖에 안된 도민참여예산제는 주눅이 들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

- 현재 도민참여예산제에서도 사업공모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각 시군 담당 부서의 검토, 도 실국에서의 심사와 검토를 거치는 등 최적의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의의 잣대를 너그럽게 적용해주시길 바랍

(3) 예산 심의현장을 참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도의회에서 도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시 도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관하여 도 예산에 관한 더 넓은 안목을 심의 현장에서도 얻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랍

4. 도민참여예산규모의 확대

-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충남 도민참여예산사업의 규모는 충남도 본예산 총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도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재정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며 공동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필수적 시스템임
- 그러므로 도민참여예산사업은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시행해온 사업²²⁾보다는,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공동체를 위한 사업의 비중이 커질 필요가 충분히 있음
-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확충되어 전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데 도민참여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방향타를 조정해 나가야 함
-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공동체 및 취약계층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평균이 4.61%임. 그런데 우리 충남은 겨우 총액대비 0.8%에 지나지 않는 저조함을 보이고 있음²³⁾
- 이는 도민참여예산사업비의 현 규모로는 아직 공동체 결속을 위한 사업으로까지 손을 펼칠 수 없는 현실임을 의미함
- 공동체 결속을 위해 도민참여예산제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욕구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예산규모의 대폭적인 증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官에 의한 추천인 수를 줄이고 사회적

22) 일반 행정 사업이나 도로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23) 「주민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 세계일보. 2021.10.21.

이은주 의원(정의당) 국정감사보고자료(35), 2021.10.21.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예산편성과정에 담겨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도 필요함

- 뿐만 아니라 도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집행되는 현장에는 도민참여예산사업임을 알 수 있는 표기를 두어 도민참여예산제의 관심을 유도해야 함

(4) 심의를 앞둔 의원들께 바람

- 지난 10월 20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공유하고자 함²⁴⁾
- 전주시의회 A의원이 전북도의회 B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편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기사화 됨
- 기사에 의하면, 이 예산을 활용하여 전주 지역에서는 이미 41개 경로당에 방진망 설치공사가 완료됐고, 군산의 한 도의원은 자기 지역구 8개 면과 동의 1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밝혔으며, 익산의 경로당, 부안의 복지관 등에도 같은 업체의 견적서가 제출된 사례가 있다고 전하고 있음
- 이번 방진망 사건은 암암리에 유지돼 오던 의원 재량사업비가 되돌아 온 것이라며, 지방의원이 개입해 사실상의 재량사업비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에 특정 업체의 사업을 편성하고 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보도임
- 2022년 도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남 역시 이러한 악행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매의 눈으로 확인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결 론

- 도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해 왔던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의회의 대의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참여예산사업의 성격에 맞는 재정 분야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실험현장이며,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를 좀 더 많이 예산에 담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무형의 사회 간접시설과 같은 시스템임
- 따라서 도민참여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도민참여위원회에서 검토·숙의하여 결정된 공모사업들이 도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주실 것을 도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서 건의드립니다

24) 「말 많던 ‘의원 재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통해 부활하나」, 경향신문, 2021.10.20.